

[노 전 대통령 오늘 소환]

돈 성격·인지시점 규명이 열쇠

■ 600만 달러 미스터리 풀리나

盧 “퇴임후 알았다” 일관… 100만달러 용처엔 함구

檢 포괄적 뇌물죄 입증 ‘깜짝카드’ 내놓을 지 주목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의 핵심 쟁점은 박연자 태광실업 회장이 건넸다는 미화 600만 달러의 성격과 알았던 시점이다.

이 6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는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흘러갔고 500만 달러는 지난해 2월 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홍콩 계좌로 입금됐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은 이 돈이 박 회장에게서 유입됐다는 사실을 대통령 퇴임 뒤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돈을 부탁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퇴임 전에 알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00만 달러 거래를 인지한 시점은 돈의 성격을 확인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사전에 알

았다면 ‘뇌물’로 인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측은 돈의 성격에 대해 100만 달러는 권 여사가 빚을 갚으려고 부탁했고 500만 달러는 ‘호의적 투자’였지만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투자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용처도 돈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금융거래의 흔적이 남은 500만 달러의 용처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100만 달러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은 여전히 함구하고 있어 검찰의 애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았고 용처도 아직 밝히지는 못했지만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누렸던 사업상 이득의 ‘포괄적’ 반대 급부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정부를 놓고 30일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불렀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에 맞서 검찰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깜짝 카드’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노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둔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 두 통지의 돈을 나눠 질문지를 따로 만들어 집중적으로 추궁할 채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한 뒤 거의 매일 강도 높게 조사했는데 이는 정 전 비서관의 협의 사실에 대한 수사자보다는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고리 역할을 했던 그의 ‘결정적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박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방어막을 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박 회장을 떠난 이 돈의 종착지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라는 ‘화살표’를 빠대로 그의 포괄적 뇌물 혐의에 대한 설계도를 그린 만큼 30일 소환조사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입증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짐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는 또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금을 빼돌려 조성한 12억5천만원의 성격과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의 뒷으로 건넸음에도 권여사가 자신이 받아았다고 해명했던 3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전달한 3만 달러 등을 둘러싼 의혹도 풀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이 일단 청사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경호 책임이 검찰로 넘어오는 만큼 청사 진입 시점과 조사 뒤 귀가 시점에 직원 1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 경호팀과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이날 대검 공안부 주재로 예행 연습까지 실시했다.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중수부 역시 막바지 준비에 몰두했다. 중수부는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문 사항 200여개를 업선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시로 통화하며 노 전 대통령 저녁식사 문제까지 논의하는 등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1120호 특별 조사실도 점검하면서 세면도구 등을 갖춰놓는 동시에 환기구 등 각종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정확한 수행인원을 파악해 본관 15층에 대기실을 만들 계획이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시절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자 안 원쪽)이 노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로 들어가다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출두, 억측 정리되는 자리돼야”

盧측 최종 점검회의

요한 실무적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에 바쁜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에서 출발하기 한 시간 전에야 취재진에게 시간을 알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이동경로나 방법 등을 극도의 보안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오전 7시에서 7시30분 사이에 출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고, 출발 전 별도의 성명이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되 상황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을 향해 간단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경호팀의 관단에 따라 청와대 버스를 이용, 고속도로로 이동하고 중간에 한 번 정도 휴게실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조사 내용에 대한 대응보다는 오히려 이동 과정의 안전 및 경호문제, 실제 검찰 조사과정에 필 4~5명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후 1시 30분 출두 → 6시께 저녁식사 → 심야조사

■ 미리보는 노 전 대통령 오늘 일정

실로 자리를 옮겨 조사를 받는다.

특별조사실에서는 우병우 중수1과장이 전체 조사를 총괄하고 수사 검사가 협의별로 돌아가면서 배석해 조사를 진행한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재인·전해철 변호사가 돌아가며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4시간 정도 집중 조사를 받고 나서 오후 6시께에는 대기실에서 수행 참모들과 저녁식사를 한다.

식사 후 조사는 곧바로 이어진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치려 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부르기도 어렵기 때문에 박연자 회장과의 대질신문도 예상된다.

때문에 조사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조사가 끝나면 노 전 대통령은 곧바로 봉하마을로 되돌아가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盧 예우·경호 불상사 없게 …”

檢, 만일의 사태 대비 청사 주변 경찰 500~600명 배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3년 6개월만의 전직 대통령 소환에 대비해 분주했다.

검찰은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우선, 검찰은 소환 당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위대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주변에 집결할 것으로 보고 계란 투척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주변에 경찰 500~6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문과 후문 앞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청사 전체를 감싸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문 앞에 보안 검색대를 설치한 뒤 검찰 직원과 미리 비표를 받은 취재진의 출입만 허용한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관용 차량을 제외하고 어떤 차량도 들어보내지 않을 방침이며 주차장도 모두 폐쇄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대검은 이미 직원들에게 30일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검찰은 소환 당일 청사 앞 도로를 통제하지는 않지만 노 전 대통령이 오는 시점에 맞춰 신호등은 조절할 것

법원 경매부동산의 빠른 공고

